

이용호 “선박 화물과적, 세월호 이전으로”

“2014년 급감했다가 올해 1~8월 68건으로 급증... 제2의 세월호 나올 수밖에 없어”

적발된 화물과적 선박 수가 세월호 사건 이후 2014년에 급감했다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전국 선박 과적 적발건수는 2011년 83건, 2012년 74건, 2013년 86건으로 매년 80건 안팎을 기록해오다, 2014년 들어 총 15건으로 현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해 다시 급증해, 2015년 55건, 2016년 8월까지 68건에 달했다. 올해 화물 과적으로 적발된 선박 수는 이미 작년 한 해 적발건수를 넘어섰다.

선박의 화물과적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으로, 2011년 이후 총 118건을 기록했다. 그리고 목포가 74건, 평택이 5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과적 적발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지역도 있었다.

속초·동해·부산 총 3곳이며, 전북 부안 격포항의 경우 안전 매뉴얼을 준수하는 곳으로 밝혀져 지난 4월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이용호 의원은 “세월호의 교훈에서 보듯 한 번의 사고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선박의 경우, ‘지나친 단속’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관당당국은 철저한 단속과 제도 정비를 병행해, 목숨을 담보로 운반비용을 절감하려는 일부 불명치

한 눈속임을 방지해선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선박 화물을 과적하는 관행이 세월호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이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계근을 마친 뒤 화물을 추가로 싣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제2의 세월호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안전처 해양본부는 “계근장이 부두와 떨어져 있어 계근 후 화물을 추가로 싣는 행위를 모두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 후 양담배 점유율 40% 이상으로 경총 작년 반짝 금연 효과... 올해 담배판매량 매일 증가 추세

정부가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후 첫해에 반짝 효과가 나타났지만 올해 다시 담배판매량이 증가추세로 돌아섰고, 40% 미만으로 유지되던 양담배 점유율이 40%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담배 판매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43억 5천만갑, 2013년 43억갑, 2014년 43억 6천만갑에서 2015년 33억 3천만갑

으로 담뱃값 인상 후 판매량이 일시 급감했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24억 3천만갑이 판매돼 월평균 3억갑이 팔린 셈인데, 이는 2015년 월평균 2억 8천만갑보다 2천만갑이 늘어난 수치다. 게다가 올해 1월 2억 7천만갑에서 8월 3억 2천만갑으로 매일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 판매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양담배 점유율은 2012년 39.1%, 2013년 39.3%, 2014년 38.8%로 40%대 미만

이었지만,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43.2%, 2016년 8월까지 42.4%로 40%대 이상으로 증가했다.

국산담배 판매량이 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산담배 이용자들이 더 많이 금연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양담배 이용자로 이동한 것으로도 판단된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담뱃값을 대폭 인상했지만, 담배판매량이 올해 다시 늘고 있고, 애연가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일부 양담배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비싼 담뱃값에 서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 이루어고 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담뱃값 재조정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용호 의원은 “최근 양담배 회사들이 담뱃값 인상을 악용해 2천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일이 밝혀졌고, 정부는 작년 한해에만 정부는 3조 5천억원 세금을 더 걷었다”고 꼬집었다. /순창=이원일 기자

“지진대응 교육·내진보강 필요”

최인정 “내진설계 위한 국비 등을 2차 추경에 편성해야”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국민의당, 군산 3)은 28일 학생안전을 위한 지진대응 교육 훈련 실시와 건축물 내진설계 및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 특별법 제정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인정 의원은 “최근 경북 경주의 지진을 계기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많은 사람이 동시에 찾는 다중이용시설과 학생들이 있는 학교건물의 내진설계 및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도교육청의 교육부와 의 갈등 관계를 지적하면서 “내진설계를 위한 국비 등을 2차 추경에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사업은 지역교육청 만의 노력으로는 예산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가재난대응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학교재난 예방기금 조성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사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도의회 입성 이후부터 줄곧 건축물 내진설계의 중

요성을 강조해왔다.

실제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5분 발언을 비롯해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고, 교육감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했으며, 전북지역 학교건축물 80% 이상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진 발생시 학생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와 학교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내진설계, 이를 위한 특별예산지원 등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그러나 최 의원의 이런 지진 관련 의정 활동은 국내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데다 도내 역시 지진으로 인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왔기 때문에 주목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하고 진동이 전북 전역에 미치면서 지진피해 우려가 현실화되자 의회 안팎에서 최 의원의 의정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한편 현재 도내 학교 건물 4,985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437동으로 8.8%에 불과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인 상태다. /신광영 기자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실현 전북운동본부 출범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파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실현을 위한 전북운동본부가 28일 출범했다.

전북운동본부에는 정의당 전북도당을 비롯해 전북도사회복지협의회,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 전북교육연구소 등 20여개 시민단체가 동참한다.

이들은 “지난 30년간 민간에서 모금을 통해 어린이들의 병원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더이상 어린이병원비 만큼은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제

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면서 “병원비는 보통 외래진료비, 약값 및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입원진료비로 나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입원진료비다. 국민건강보험료의 누적액(2016년 현재 17조)을 사용해 국가가 책임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이미 중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의료 비용에 대해서도 최소한 중학생인 16세가 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며 “전북운동본부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도민 5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김관영 “공정위 약관 심사하면 80%가 ‘자진시정’”

2014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약관심사 결과 25개 기업이 3번 이상 약관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782회에 달한 약관심사에서 80%의 경우가 심사 중에 약관을 개정해 공정위 제재를 피했다.

28일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군산)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불공정 약관심사 결과(2014년~2016. 8월)’에 따르면 전체 782회의 약관심사가 진행됐다.

이중 393건은 공정위가 직권으로 인지해서 조사가 개시됐고 나머지는 신고에 의해서 시작됐다.

782회의 약관심사 중 롯데쇼핑이 7번의 심사를 받아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았다. 대상 기간(32개월)을 감안하면 4~5개월 사이에 한 번씩 심사대상에 오른셈이다.

홈플러스와 현대자동차가 각각 5번의 약관 심사를 받았고, 동부화재와 카카오 등 8개 기업이 4번, 삼성카드와 엘지전자를 포함 14개 기업이 3번 심사대상에 올랐다.

전체 약관 심사 사유의 절반 수준인 383건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 사유로 나타났으며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금 약관조항’이 183건, ‘고객의 법정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한 사유’가 39건, ‘법률상의 책임배제’가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약관심사 결과 전체의 80%에 달하는 642건이 약관심사 도중 자진 시정해 ‘심사절차’가 종료됐으며, 무혐의 처분 102건, 시정권고 27건, 경고와 과태료 처분 5건이다.

이에 대해 김관영 의원은 “2년 8개월 사이에 3회 이상 심사대상에 오른 기업들이 25개나 될 만큼 약관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정위 심사대상이 폐쇄야 문제를 시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 스스로 공정한 약관을 만들 수 있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안보 문제로 국정교과서 원고본 공개 못해”

교육부가 내년부터 사용될 예정인 중·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원고본을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소명서를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부의 강경한 반대에 곤혹스러워진 야당 의원들은 국정교과서 원고본을 제출하는 대신 원고본 열람 등 다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교과서 원고본을 공개할 경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교과서 원고본 제출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최근 북핵 등 여러 안보 문제로 주변 국가의 외교협력에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국정교과서 원고본 미제출 의견이 담긴 두 번째 소명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첫번째 소명서 제출 당시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 국정교과서 원고본 미제출 사유를 외교·안보 문제와 연결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를 의태라 질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원고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로 이런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명서를 보니 장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다”면서 “핑계를 만들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유선영 교문위) 위원장께 형사고발을 검토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소명 내용이 의원들이 보기에 충분한 내용은 아닐 수 있다”면서도 “원고본을 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검토본이 나오면 공개해 의원들에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개 시기가 문제지,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

축성 563주년

제43회 고창 모임향제

2016.10.5(수) ~ 9(일) (5일간)

고창군 + (사)고창모양성보존회

“먹사는 미래다”